

연금연구회 · KARP대한은퇴자협회 공동개최

#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

“개악안을 개혁안으로 포장해 날치기 통과 시도 중”

2025. 2. 11 (화) 2PM

프란치스코 회관

## 연금개혁은 사회개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차 연금연구회 좌장을 맡은 이근면입니다.

개혁으로 둔갑한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청년세대의 부담 가중, 그리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연금 제도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대 간 정의와 직결되는 도덕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근로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은퇴세대에게 노후를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다소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온 우리 연구회의 '더 내고 덜 받기'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해 하루라도 더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납부 기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 사회개혁 역시 필수불가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들의 빚은 무겁게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이번 논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우리 연금연구회는 오늘도 연구자의 양심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 제7차 세미나 역시 그 일환입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마치 주차 중인 차량의 급발진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우려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단기적인 미봉책이나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개혁은 결코 정치적 흥정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호도하는 어떠한 시도도 안 됩니다.

연금개혁은 반드시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하며 청년과 아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개혁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청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모이신 전문가들의 지혜와 통찰이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연금연구회 제7차 세미나 좌장 이근면

연금연구회·KARP대한은퇴자협회 공동 개최 “국민연금포럼”

-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 -  
“개악안을 개혁안으로 포장해 날치기 통과 시도 중”

### 주제발표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김재현 상명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

### 토론

- 좌장 : 이근면 성균관대 석좌교수(연금연구회 상임고문)
- 토론자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연금연구회 총무)
  - 김지영 인구전문기자(이투데이)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연구회 국제교류 총무)
  - 박동석 아이뉴스24 사장
  - 서동휘 청년회원
  - 주명룡 회장(대한은퇴자협회)
  - 주정완 논설위원(중앙일보)

#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강화 방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금연구회 리더)

## 요약

###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병행

- 기초연금 재정 절감 전제 하에, 노후소득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 도입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되, **저소득층에게는 더 높은 연금 지급을 적용**
  - [예: 소득수준·가입 기간별로 1.1(대체율 44%)에서 1.25(대체율 50%)까지 차등 적용]
    - 동일한 연금 지급을 원칙(Equivalence principle)을 위반할 지라도 긍정적 면이 더 많기 때문
  - 국민연금 보험료는 10년 이내에 최소 5~6% 포인트 인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국민연금 인정소득을 **높여서** 연금을 더 받게 함.
    - 노동시장 개혁(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과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
      - ※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 포인트** 인상 효과에 해당
    - **1석 4조 효과 발생**(실질소득대체율 5%p 인상, 5년치 월급과 퇴직금 추가 수입, 가입자 증가)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 인정소득 기준 통일하여, 중간 이상 고소득층 연금액 증가 유도

### □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모든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함되는 조치)

- **(후세대 부담 가중되는 정부안 대신)** 중간단계 자동안정장치인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 채택**
  - 조속한 노동시장 개편 전제로, 기대여명계수는 가급적 빨리, 늦어도 2033년부터는 적용
  - 기대여명계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약 2% 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정안정 달성
    - ※ 소득대체율 40% 중에서 35%pt는 보험료 인상, 약 2%pt는 기대여명계수로 달성
    - ※ '대체율 40%-보험료 15%-준자동안정장치 도입' 해도 **완전한 재정안정 달성 불가능**
  - 기대여명계수, 즉 준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액 하락을 방지하는 조치 병행
    - 노동시장 개편을 통한 '활기찬 노후 (Active ageing)'를 전제로,  
**기대여명계수 작동과 연금가입·수급연령을 연계하여 연금액 하락 방지 (핀란드 방식)**

### □ 신규 수급자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가며 취약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

- 노인 70%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예: 2025년 월 228만원 이하)으로 선정기준 변경
- 현금급여와 현물속성급여(In-kind Benefit)로 분리(예: Housing allowance)
-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대 빈곤선 이상의 수급자 연금액은 동결

###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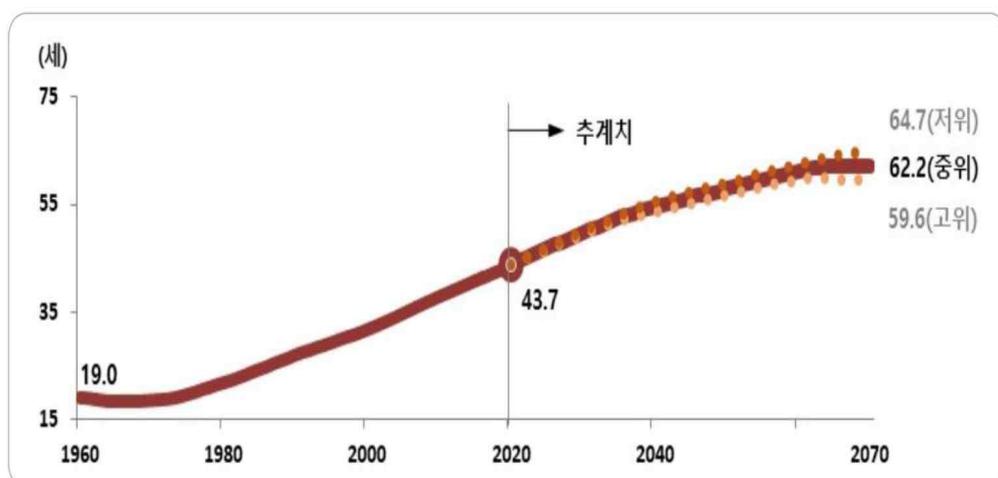
- 개별제도와 재정의 통합이 아닌 **투명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통합 운영을 의미**
  - 국민연금과 퇴직금 부분을 100% 일치시키고, 공무원 추가 부담하는 4.5%pt는 DC형으로 지급
- **퇴직연금의 점진적인 강제화 조치 시행으로 OECD 기준 소득대체율 15%pt 추가 확보**
- 대상자 기준 53%인 가입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면 OECD 공식 소득대체율로 인정됨.

## 1. 우리가 처한 연금 현황과 주요국들의 연금운영 현황 비교

- 새로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즉 **현대화된 제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 연금제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장밋빛 전망 하의 제도를 그대로 수입한 것임.
    - 신생국으로서,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제도 도입이 어려웠기 때문임.
  - 선진국에서 **연금개혁 TF가 가동되던 그 시점**에,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도입
    - 1차(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이후 연금제도가 포퓰리즘 정책 수단으로 작용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도입 초기에 비해 고급여 제도 운영
      - 은급제도로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던 일본 공무원연금은 1959년 개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민관 동일한 연금(Common pension) 운영
  - 연금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과 팩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
    - 글로벌 연금개혁 추세와 동떨어진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주요 원인
  - 2018년 4차 재정계산(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독일 Study Visit**에서 있었던 일
    - 독일 전문가가 바람직한 우리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언급하려는 순간 10여명에 달하는 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답변 듣는 것을 거부하였음.
      - 자신들 생각과 다른 개혁방안을 언급할 것 같아서 그러했을 듯!
  - 4차 산업혁명, KTX 운행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증기기관차 시절 연금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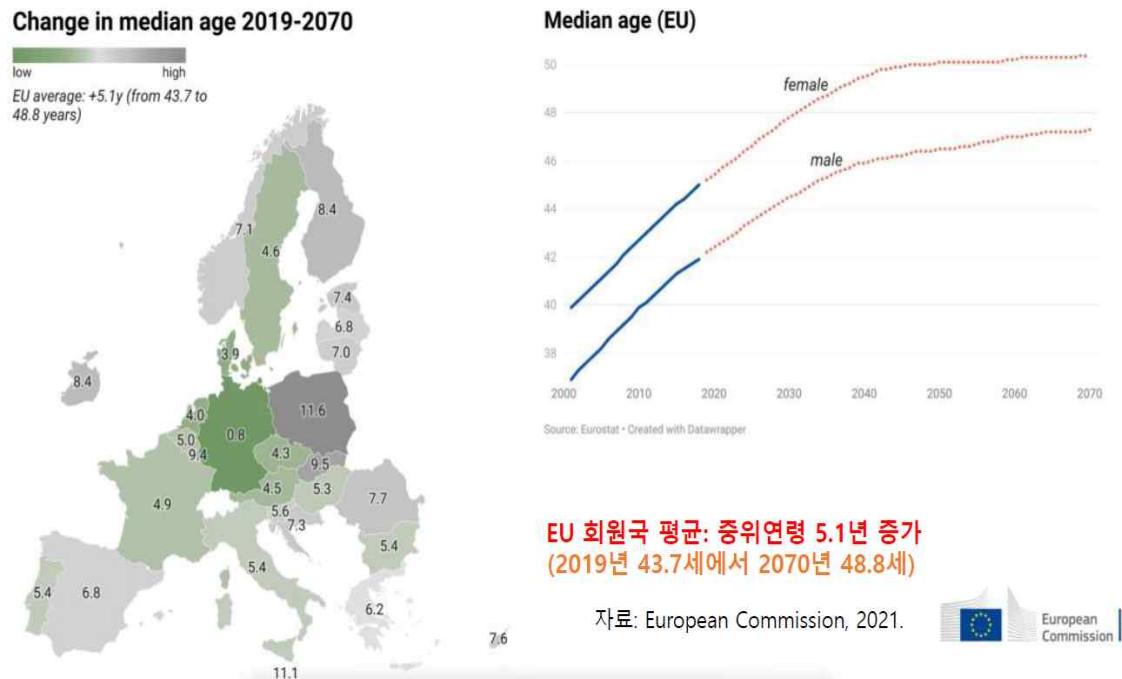
### 우 한국과 EU 회원국의 인구구조 관련 현황과 전망

[그림] 한국 중위연령 : 43.7세(2020년) ⇌ 62.2세(2070년). **중위연령이 18.5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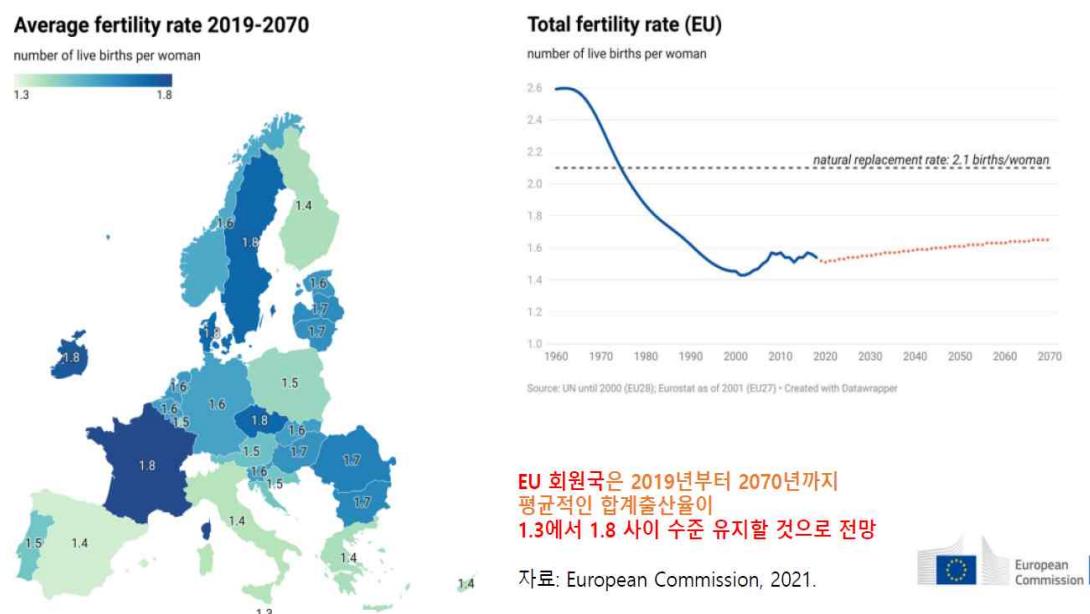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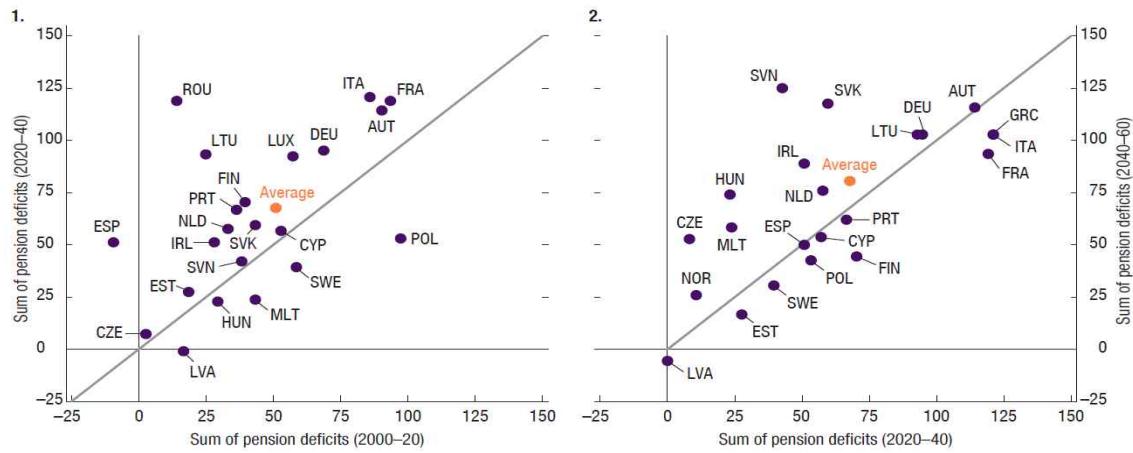
[그림] EU 회원국 중위연령 평균 추이: 5.1년 증가(2019년 43.7세) ⇔ 2070년 48.8세)



[그림] EU 회원국 합계출생률 변화 추이(2019-2070)



[그림] EU 회원국들의 2060년까지 연금 누적적자(Cumulative Deficit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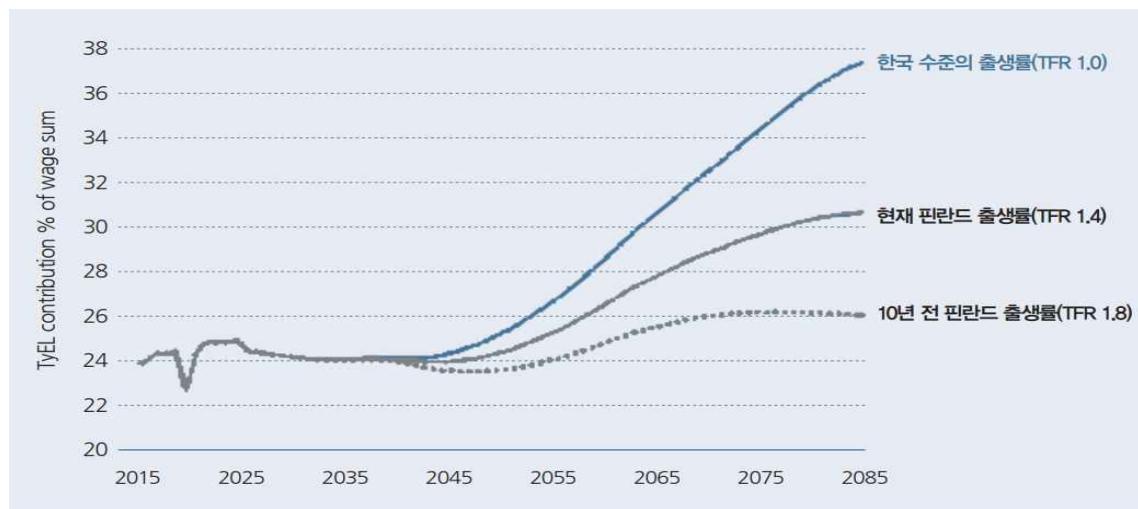
주: 대다수 EU 국가들은 누적적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스웨덴 등은 장기적으로 누적적자 감소함.

출처: IMF staff calculations (Pension Reforms in Europe, 2021).

### 우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 (2024년 OECD Pension Experts Meeting 참가자 등)

- **한국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한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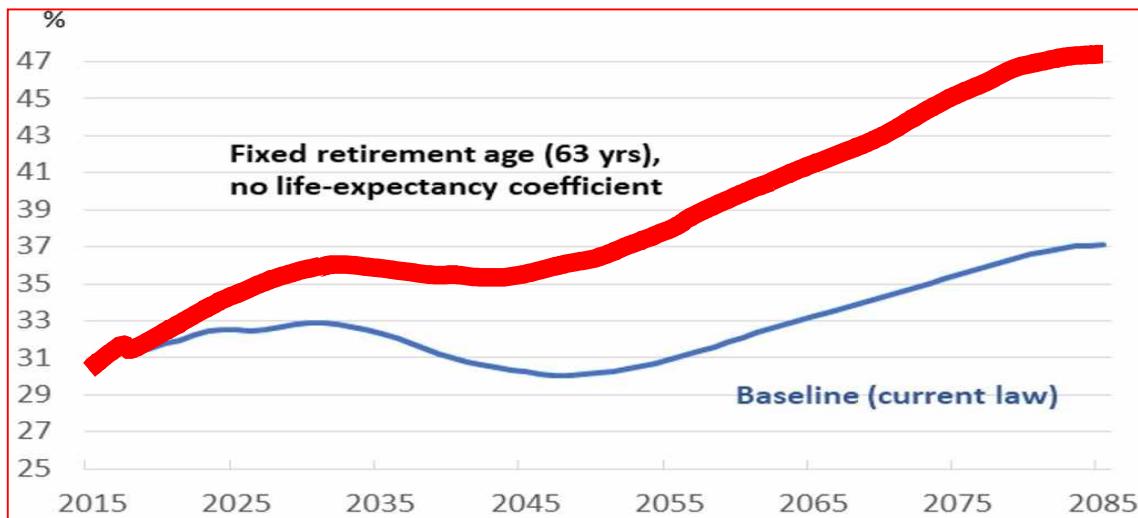
[그림] 출생률 변화가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주: 한국 출생률(TFR 1로 가정)과 핀란드 현재와 과거(10년 전) 출생률을 적용할 경우의 예상 보험료

원자료: ETK Acting 의장인 Mikko Kautto(2021)가 본 진술인 요청으로 특별 작업하여 추정한 수치임.

<핀란드 소득비례연금 장기 전망 : 준자동안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하지 않고, 연금수급연령을 63세로 고정시킬 경우 - 47%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함!>



원자료: Ismo Risku (2022), Finnish Centre for Pensions. 윤석명 외(2022)에서 재인용

- 이즈모 리스쿠(Ismo Risku) - 핀란드 국가공인 계리사로 ETK 기조실장
    - 봄철에 농부가 계을려 적기에 작물을 심지 못하면, 가을에 수확할 곡식이 없음.
    - 그런데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지출로 사용될 소요 재원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음. 이는 재정계산과 국제 비교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음.
    -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음에도 현재 소득 대비 너무 적은 액수만을 저축하고 있는 것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움. 이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
  - 미카 비드룬트(Mika Viidlund) -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의 '44% 소득대체율-13% 보험료율'안에 대한 평가(2024년 6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 40%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된 13%가 아닌, 15%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함. 개혁이 지연되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부채가 전가됨.
    -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면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일 수 있음.
    - 개혁 대안으로 핀란드식 또는 더 급진적인 스웨덴식 개혁까지도 고려해야 함. 단 개혁은 빠를수록 좋음. 핀란드는 연금 지급보장 조항이 없음.
-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소식을 접한 뒤, 최근 본 진술인에게 보낸 이메일)
- Looking forward how the pension reform process will proceed in Korea. I hope that **the opposition party will understand the message and the calculations you have put forward** and are able to come to a somewhat reasonable conclusion.
-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자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속기록 첨부)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30쪽

여러 가지 부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6쪽입니다. 이게 제 개인 말씀이 아니니까. 작년에 OECD Pension Experts Meeting에 온 분들, 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즈모 리스쿠 같은 친구는 그립니다. ‘제때 곡식을 심어야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한국은 너무나 적기에 제대로 곡식을 못 심어서 나중에 미래세대에 연금 줄 게 없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미카 비드룬트는 ‘국회에서 논의된 13%가 아닌, 이건 소득대체율 40% 유지할지라도 15% 이상으로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핀란드는 지급보장 조항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니 지금 제가 제시한 숫자들에 대해서 ‘어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 다수당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를 바라겠다’, 이걸 영문으로 한 열흘 전에 보내왔습니다.

-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Herman Kruse) 박사(노르웨이 연금 재정 추계 담당. 2024년 6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 노르웨이는 2011년 개혁(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으로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 총 균로소득 기준으로 18.1% 소득세가 균로자 개인의 연금계정에 적립되며, 연금 소득대체율은 42%임. 우리 두 배 넘게 부담하는 데도, 우리 수준으로 지급함.
  - 투명하게 연금개혁 논의과정을 운영하고, 중립 성향 전문가 견해를 들으면서 정치적 해결책을 찾다 보니 큰 규모의 개혁을 쉽게 할 수 있었음. 이 점이 한국에 보여 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음.
  - “정치인이 제대로 된 연금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소득대체율 40% - 기여율 9%’의 한국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 기여율을 더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며, 소득대체율 높이려면 기여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함.
-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조지 쿠드르나(George Kudrna) 박사(2024년 6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 호주의 유일한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은 정부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함.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자의 약 25%가 자산조사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함.

- 현재 GDP 대비 3% 미만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도 GDP 대비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호주 기업연금(Superannuation)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조사에 기인함. 기업 연금으로 공적연금 지출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어, 2060년 이후에는 호주 유일한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2%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됨.
  - 한국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 GDP 대비 3.2%로 예상되어 호주와 크게 대비됨.
  - 호주도 순소득 기준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음. 그런데 자가 주택(비용 및 추정 임대료 포함)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0%로 크게 하락함.
  - 가치분소득 기준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으나, 노인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높은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권고하였음. 지금보다 더 잘 조준된 선별적인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낮추는 방안을 제시함.
- 파리 OECD 사무국의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연금 분석관
-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3%' 연금은 지속 불가능함. **40% 소득대체율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13% 이상으로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함.**
  -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환영함. 전 근로기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게 하여, 연금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게 해야 함.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제거하되, (저소득자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초 연금을 더 강화해야 함.
  - GDP 대비 연금 지출액 전망치가 포함된 'Pensions at a Glance 2023'에서 한국은 국민연금만 고려했음.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면, 7.5%(2060년)보다 훨씬 높아질 것임.
  -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장기 전망치를 공표한다면, OECD 발간 보고서의 GDP 대비 연금 지출액에 이들 모두를 포함시킬 것임.**
  - (OECD 회원국 중 공적연금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 포함하여 4개국에 불과함. 본 진술인 추산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공적연금 지출을 포함한다면, GDP 대비 지출액이 1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앤드류 라일리 연금 분석관은 OECD의 Pensions at a Glance와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Korea(2022) 공동 저자임. 한국 정부가 모든 공적연금의 장기 전망치를 공식 보고서로 발간한다면, 그 수치가 반영된 GDP 대비 연금 지출액 전망치를 OECD 보고서에 수록하겠다고 확약하였음.

- 일본 연금 업무 담당 공무원 → 한국 공적연금에 대한 질문
  - 일본(18.3%)보다 보험료를 훨씬 적게 부담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일본 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은, 부부 동시 받는 기초연금(국민연금)과 남편 후생연금액 합계임.)
- 일본 공적연금액 수준(2021년말 기준)
  - 국공제(국가공무원연금)가 월 17만 2천엔, 한화로 월 160만원 수준), 지공제(지방공무원연금) 월 17만 6천엔, 사학공제(사학연금) 월 17만 6만천엔 수준임.
  - 우리나라 공무원·사학연금 평균액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이렇게 운영함에 따라, 2115년에도 22.9조엔(약 200조원, 2019년 현재가치)의 적립금을 보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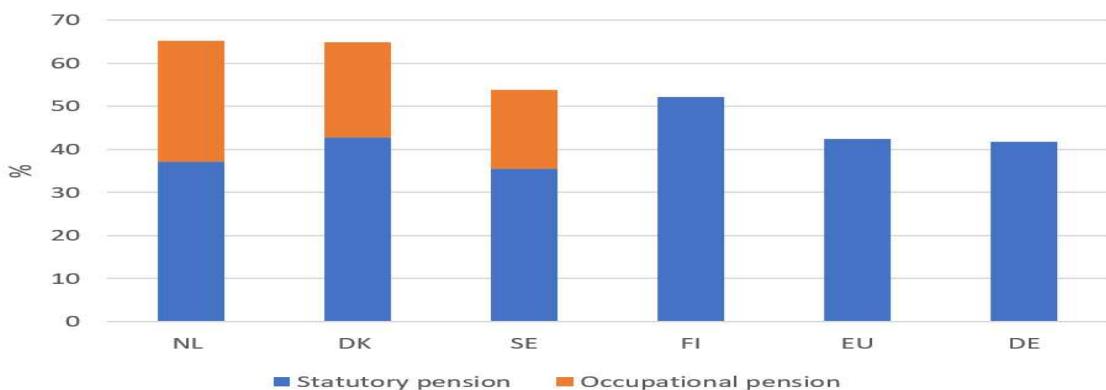
#### 일본의 사학공제 등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액 비교 (추정치)

区分	旧厚生年金	国共済	地共済	私学共済	厚生年金計
平均年金月額 (令和3(2022)年度末) (老齢基礎年金分を含む)					
	円	円	円	円	円
計	143,965	172,596	176,092	176,053	148,680
男性	163,380	175,911	182,719	191,681	166,087
女性	104,686	155,830	164,735	152,416	113,317
女(男 = 100)	64.1	88.6	90.2	79.5	68.2

주: 18.3%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평균액이 월 160만원 수준임.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합한 평균액은 월 140만원 이하임.

출처: 社会保障審議会年金数理部会(2021). 第3回社会保障審議会年金部会(2023年)

#### [그림] 유럽 5개국과 EU 회원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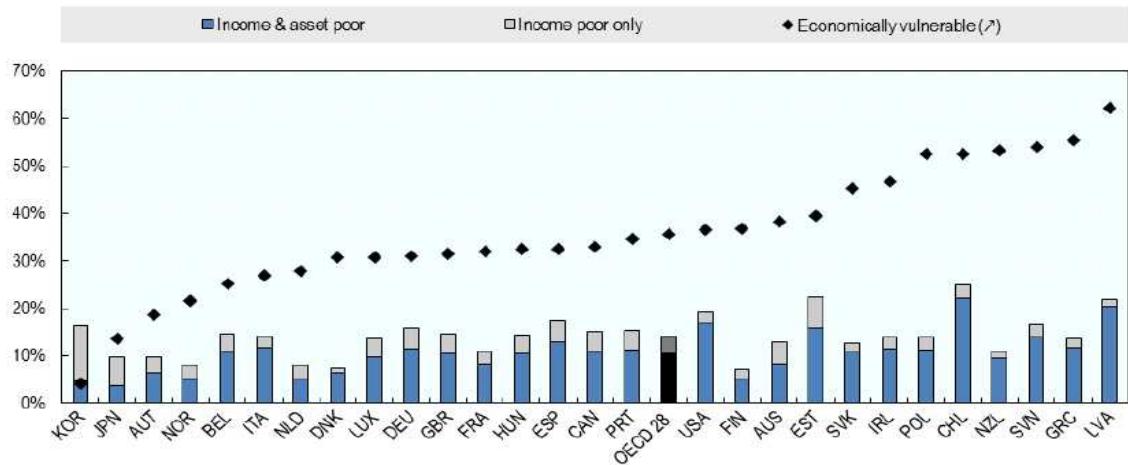


주: 노후소득 대부분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페란드 소득대체율이 50% 수준으로 가장 높으나, 24.4%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 보험료 18.6%를 부담하는 독일 소득대체율이 40% 중반, EU 회원국 전체의 소득대체율 역시 4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특히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도 못 미치며,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으로 나머지 노후소득을 보충하고 있음.

원자료: Finnish Centre for Pensions의 Vidlund Mika, 윤석명 외(2022a)에서 재인용

## [그림] OECD 회원국 빈곤율 추이(자산 고려시 한국의 빈곤율 대폭 하락)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Sourc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wealth](http://oe.cd/wealth).

- 캐나다는 15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재정평가(사실상 무한대 기간의 재정평가)를 실시하며, 150년 뒤에 가서도 연금을 지급할 준비금 100%를 확보하고 있음.

### <표>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 재정평가기간 (1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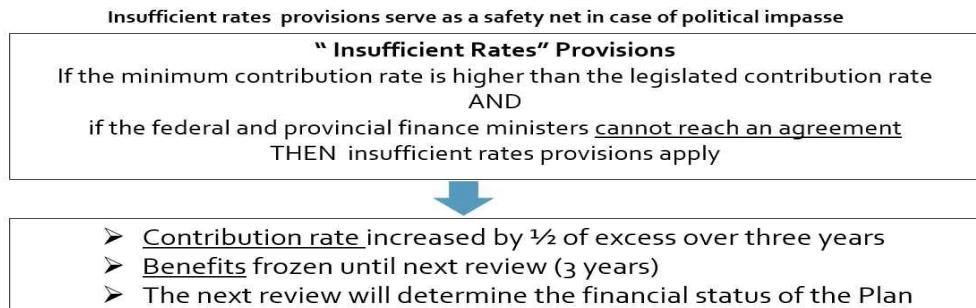
(단위: 9.9% contribution rate, \$ billion)

	Length of the Projection Period in Years					
	75	100	125	150	175	200
Toal Assets	2182	2374	2484	2547	2583	2604
Total	2090	2326	2465	2546	2594	2622
Asset excess(shortfall)						
Total Assets as a Percentage of Total Obligations(%)	92	48	19	1	(11)	(18)
	104.4%	102.1%	100.8%	100.1%	99.6%	99.3%

주: 150년 뒤 연금지급금 100% 보유. Office of the Chief Actuary(Actuarial Study No.19, 2018)

- 캐나다 CPP는 재정안정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Insufficient Rates Provisions”이 있음.
  - 다음 재정계산 전(3년 동안)까지 부족한 보험료 50% 인상과 3년 동안의 급여동결을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임.

- 3년 내에 재정안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추계 주기가 3년이기 때문임.  
 [그림] 연금개혁 소홀히 할 때 적용할 강제적인 연금재정 안정화 규정



자료: Michel Montambeault. Office of the Chief Actuary, OSFI, Canada. 2022.

- 우리는 모든 공적연금제도의 부담과 급여 지급율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 매년 연금 충당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이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부담함.
- OECD 회원국 70%가 자동안정장치 도입

	적립식 DC	NDC	DB 또는 포인트 제도	재정, 인구통계, 임금과 연계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 연계	자동연계에 영향받는 소득대체율 비율
호주	○					99.8
덴마크	○				○	100
핀란드			○		○	100
독일				○		100
이탈리아		○			○	100
일본			○	○		100
한국						0
네덜란드				○	○	100
스웨덴	○	○		○		100

원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윤석명 외(2020)에서 재인용

## 2. 연금제도 개편 방향 (2022년 9월 OECD 권고 내용과 유사)

- 한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보편적인 제도 적용, 급여 적절성, 제도 지속가능성 문제를 균형 잡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

- 여러 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필요**
-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철저하게 분리. 기여형 국민연금제도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
  - **취약계층에게 최저소득 (사회정책) 또는 최저연금(연금정책) 보장**
    - 취약계층은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차등 적용하여 장기 가입 유인 제공. **Equivalence principle**을 훼손할지라도, 정책적으로 유의미
    - 소요재원은 **기초연금 개편** 통해 절약될 정부 재정투입으로 해결
  - 자동안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초래될 노후소득 감소문제는 노동시장 개혁과 결부하여 노동시장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문제 해결
    -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점진적 퇴직 활성화 방식을 채택
    -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일해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빠른 보험료 인상 추진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면적인 개편
  - 보험료 인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
    - **10년 내 빠르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포인트**
  - **더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 개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함.
    -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아닌, 소득인정액 확대와 가입연수 확대로 해결
    - 연금제도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 노동시장 개혁과 병행
  - 세금을 투입하는 정책은 연금정책이 아닌 사회정책 관점에서 접근
  - 다층소득보장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간 이상 소득자들의 자조 노력 촉진**
    - 점진적 퇴직연금 강제화로 OECD 소득대체율을 산정기준에 부합시킴.

## 우 한국 노인소득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필요

- 과연 한국의 노인 대다수가 OECD 통계처럼 빈곤한가? (**평균의 함정**)
  - **너무도 왜곡된 한국, 노인 빈곤율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성 시급**

### 3. 국민연금제도 개편 대안별 재정전망

#### 우 국민연금 모수 개편안별 재정전망 (1)

	최대적립 기금시점	기금소진 시점	부과방식비용률		
			2080년	2093년	소진시점
재정안정화안 (보험료율 15%, 대체율40%)	2052년 (3,355조원)	2071년 (△ 65조원)	35.0%	29.8%	33.7%('71)
소득보장안 I (보험료율 15%, 대체율45%)	2050년 (3,185조원)	2068년 (△227조원)	39.1%	33.4%	36.6%('68)
강한 재정안정화안 (보험료율 12%, 대체율 30%)	① 소득비례형	2048년 (2,684조원)	2069년 (△268조원)	27.6%	23.1%
	② A값유지	2049년 (2,709조원)	2070년 (△231조원)	26.7%	22.4%

자료: 국회연금개혁특위 내부 자료

#### 우 국민연금 모수 개편안별 재정전망 (2)

- 주요 가정

- (13%-50%안)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매년 0.3%p 인상('25~'36), '37년에 0.4%p 인상, 소득대체율 일시 인상('25)
- (12%-40%안) 보험료율 12% - 소득대체율 40%
  - 보험료율 매년 0.3%p 인상('25~'34), 소득대체율 40%('28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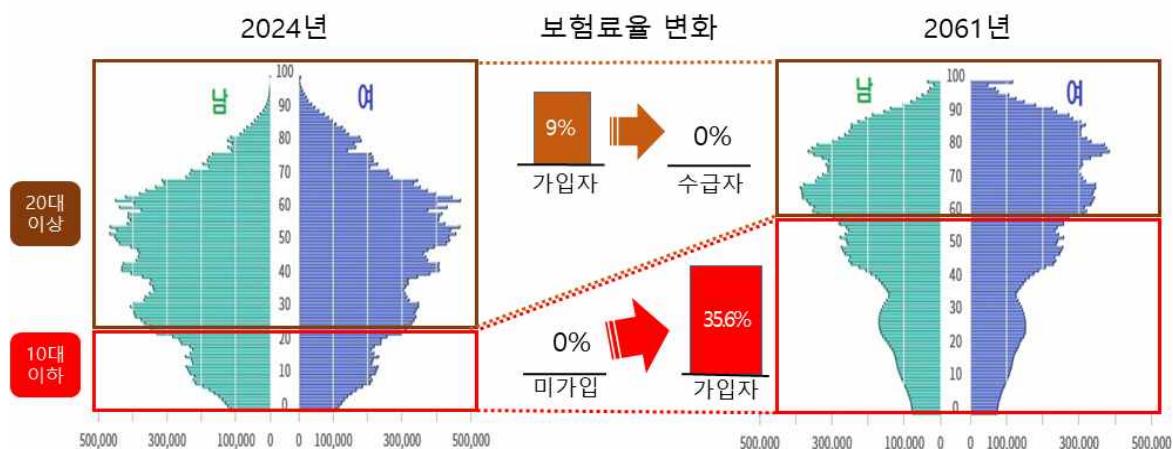
- 재정추계 결과

구 분	기금 소진	부과방식비용률		수지차	GDP 대비 총지출	
		최고	'93년		'93년	최고('83)
현행	9%-40%(5차 재정계산)	2055년	35.0%('78년)	29.7%	-773조원	9.5%
13%- 50%안	13%-50%	2061년	43.2%('78년)	37.1%	-899조원	11.8%
	13%-50% + 가입연령 64세	2059년	45.4%('81년)	38.2%	-1,028조원	13.5%
12%- 40%안	12%-40%	2062년	35.1%('78년)	29.7%	-666조원	9.6%
	12%-40% + 가입연령 64세	2060년	36.8%('81년)	30.7%	-765조원	10.9%

\* 의무가입상한연령은 현 59세에서 2025년 이후 2년마다 1세씩 상향 가정. 출처: 복지부 국회 연금특위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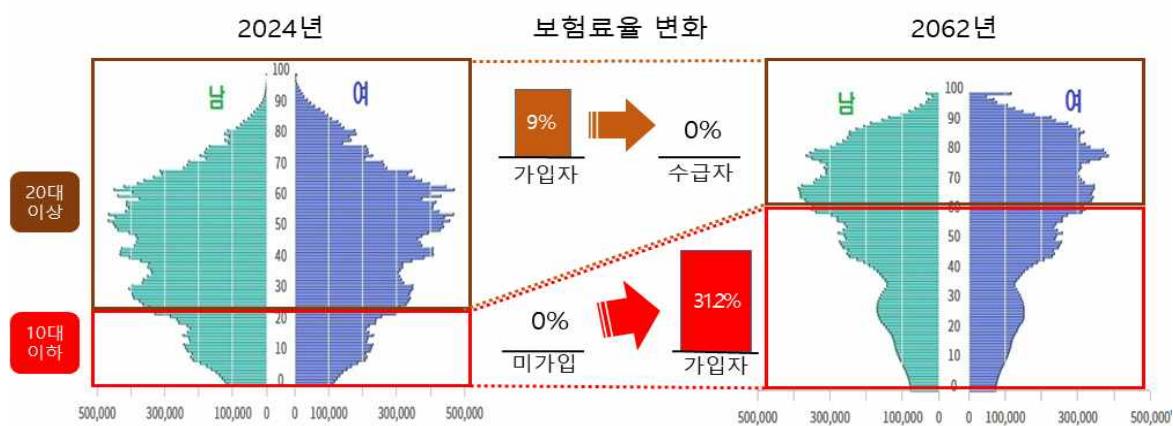
우 국민연금 모수 개편안별, 세대간 평균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 적용 시) 부담 비교

- 보험료 13% - 소득대체율 50% 안



2024년 연령대	현재 보험료율	2061년 보험료율 (기금조산 시점)	2078년 보험료율 (최대 보험료 납부 시점)
20대 이상	9%	0%(수급자)	0%(수급자)
10대 이하	0%(미가입)	35.6%(부과방식비율률)	43.2%(부과방식비율률)

- 보험료 12% - 소득대체율 40% 안



2024년 연령대	현재 보험료율	2062년 보험료율 (기금소진 시점)	2078년 보험료율 (최대 보험료 납부 시점)
20대 이상	9%	0%(수급자)	0%(수급자)
10대 이하	0%(미가입)	31.2%(부과방식비용률)	35.1%(부과방식비용률)

출처: 복지부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이 중요한 자료를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서 삭제한 뒤 학습을 시켰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의 속기록](#)]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89, 90쪽

진술인 윤석명

김미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선민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까 진술인 중에서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자동안정장치의 수준**을 진술인 중의 한 사람이 계속 했다고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 칼럼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짧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53쪽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여기 있는 전문가들 진술인 중에서 후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것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랬는데 없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대표단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칼럼 그래도 많이 썼는데 53쪽에 있는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3%짜리 이 안을 도입할 경우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가 되고 2005년생과 2035년생의 생애 보험료 부담률 차이가 21%, 퍼센트 아닙니다. 21%p 차이가 난다는 이 자료를 복지부가 국회 특위에 제출했어요. 특위에 제출한 걸 2차 시민대표단 학습자료로 만들었다가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위원 몇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그걸 빼고 다시 시민대표단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대표단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3선 의원이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은 김세연 의원님, 제가 칼럼에도 인용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도적인 거라면 이건 준법죄행위에 가까운 거다, 김세연 의원님 실명으로 제가 썼어요. 이게 속기록으로 남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당시 국회 NATV 정관용의 정책토론 생방송에서, 김연명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참석한 데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회 특위에서 당시 21대 국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께서 김용하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한테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뺀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다 보니 저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 제가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 4.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연금 재정전망

- 2023년 11월 16일 공개된 IMF의 우리나라 공적연금 관련 내용
  -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로 인해, 2070년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200%에 달한다는 내용
    - IMF 분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초연금이 포함됨.
  - 연간 연금지급율(Annual accrual rate)이 1.0(40년 가입기준 40% 소득대체율)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8% 포인트 추가 인상한 22.8%가 되어야, 국민연금에서 기인하는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또는 연금수급연령을 6년 연장하는 조치 하나만을 각각 채택할 경우에는, 여전히 GDP 대비 국가부채가 증가함.

<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들 조합 (예시)

Variable	Measurement	Steady-state level	Higher retirement age	Higher contribution rate	Lower replacement rate	Mix of policies (example 1)	Mix of policies (example 2)	Mix of policies (example 3)
Retirement age	Year	67.9	6	0	0	2	2	4
Contribution rate (employee + employer)	Percentage point	12.8	0	13.8	0	4.6	9.2	4.6
Gross replacement rate	Percent (as a share of wage)	22	0	0	-10	-3.3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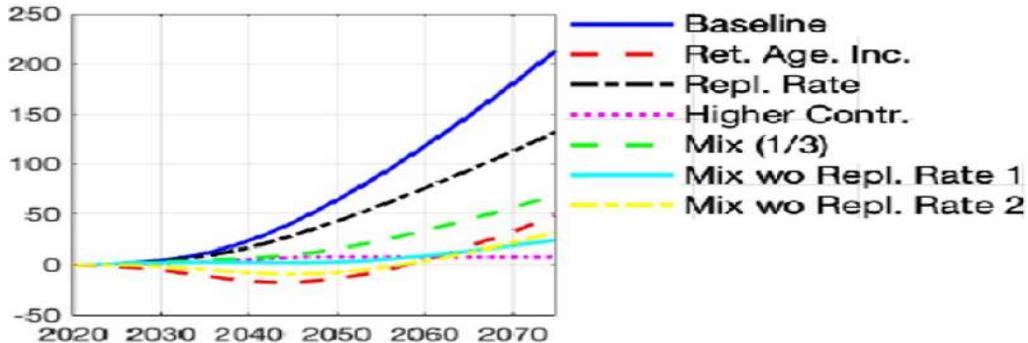
출처: IMF Staff Report for the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 균제상태(Steady-state level)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을 67.5세로 연장하고, 보험료는 12.8세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을 22%<sup>1)</sup>로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여야 함.
- 상기 정책 수단 중, 하나 또는 2가지 조합만으로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함.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2%는 A값 기준(2023년)의 42.5%가 아닌,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을 의미함.

[그림] 재정안정조치 대안별 향후 50년 후(2070년) 국가부채 비율 전망

(단위: % of GDP)



출처: IMF Staff Report for the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우 외국 제도운영 현황과 국내외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가능한 대안임.

-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으로 소득대체율 5%pt가 인상되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
  - ‘퇴직후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가능한 정책 수단임.
- ‘퇴직후 재고용’을 통한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은 1석 4조 효과가 가능함.
- 5% 포인트 해당하는 연금액 증가 외, 5년 동안의 월급과 퇴직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음.
  -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저출산으로 심화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추이 완화가 가능

## 5. OECD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통합 운영 권고

-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 나라만이 공적연금을 분리 운영 중에 있음.
- 대다수 OECD 회원국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
- OECD는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음.

## 공적연금 통합운영의 필요성

Fully integrated	Separate but similar benefits	Fully integrated with top-up	Entirely separate
Chile (1981)	Finland (1995)	Australia	Belgium
Czech Republic	Luxembourg (1999)	Austria (2004, 2009)	France
Colombia	Netherlands	Canada	Germany
Costa Rica	Sweden	Denmark	Korea
Estonia		Iceland	
Greece (2011)		Ireland (1995)	
Hungary		Mexico (2007)	
Israel (2002)		Norway	
Italy (1995/2008)		Slovenia	
Japan (2015)		United Kingdom	
Latvia		United States (1984)	
Lithuania			
New Zealand (2007)			
Poland			
Portugal (2006)			
Slovak Republic			
Spain (2011)			
Switzerland			
Türkiye (2006)			

Source: 2022 OECD Korean Pension Review.

Korea is **one of only four countries** along with Belgium, France and Germany that has maintained a **completely separate pension system**.

After moving from the current an **entirely separate system** to a **separate but similar benefits system**, it seems **feasible** to move to a **fully integrated system in the second stage**.

주: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4개국만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완전히 분리 운영하고 있음. OECD는 당분간 연금제도는 분리하면서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운영(연금 지급률 등을 통일시키는 것을 의미함)하는 단계를 거쳐, 종국적으로는 한국의 모든 공적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라고 권고하였음.

## 2022년 OECD 권고 - 공적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함

- 중단기적으로 공적연금의 **통합 관리 운영(동일연금)**을 추진함.
  - 제도 이행비용 등을 감안하여, 미국식 일원화 모형이 아닌, **2015년 일본의 Common pension(연금 일원화) 개혁 내용을 채택**
  - 즉, 연금 급여율만 통일시키고 제도 운영은 **당분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이원화(재정 분리)** 시킴으로써, **이행 비용 최소화와 재정 통합에 따른 형평성 문제 차단**
- 연금재정과 제도통합이 아닌 (즉, 별도 제도로 유지), **연금산정소득과 소득재분배 등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
  - 공무원에게도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을 지급(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9%에서 4.5%를 퇴직금으로 전환)
  - 공무원이 민간부문보다 더 부담하는 보험료(4.5%)에 대해서는,
    -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함.

<그림>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 -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원 구조(예: 사학연금)



주: 2차례의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적용한 방식과 달리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제도 개편 때마다 기존 가입자에게 지나친 기득권을 부여하였음. 통합 운영시 개혁 시점 이후에는 신구 가입자에게 100% 동일한 개혁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공적연금 통합 운영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임. 기득권은 개혁 이전 시점까지, 개혁 이후에는 국민연금처럼 신구 가입자에게 개편된 내용을 100%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혁안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는 배경임.

출처: 윤석명(2023). 사학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재정안정화와 공적연금 통합 운영 중심으로

## <부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5년 1월 23일) 주요 회의록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59, 60쪽

강남갑의 서명입니다.

우선 저는 연금 문제는 복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고 키포인트는 기금이기 때문에, 즉 돈이지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 논리로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경제학 박사이신 윤석명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은 추후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지요. 현재 같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계속 유지할 때는 연금개혁이 없다면 30년 후에는 우리 기금은 고갈되지요. 일부에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자고 주장합니다. 저도 정말 찬성합니다. 환상적이지요. 그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연금 문제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돈, 우물에서 샘솟듯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돈을 썩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소득대체율을 치밀한 계산 없이 예상하기만 한다면 미래 청년세대에게는 빚더미를 안겨 주는 아주 무책임한 우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윤 박사님께서도 아주 뻔뻔한 행동이라고 하셨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내다팔 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투 잡을 뛰어야 되나 하고 가정 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게 되는 거지요.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제도 이외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모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까지 이 연금개혁을 하는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정말 국민연금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보장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임시방편 연금개혁이 아니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저는 관련 부처인 기재부라든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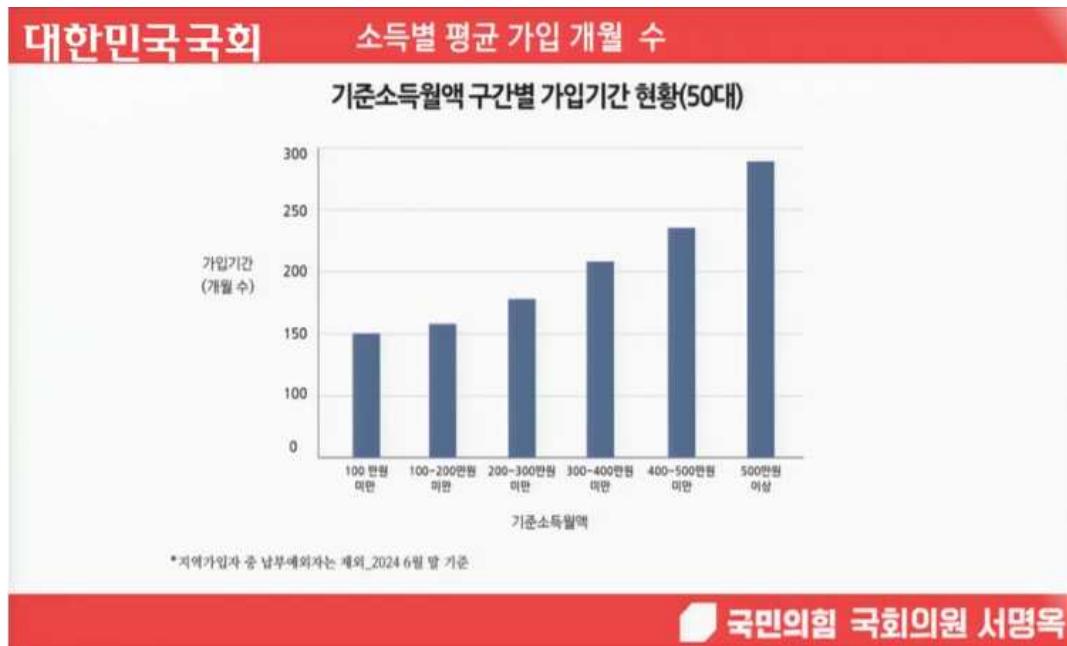
관련해서 PPT 잠깐 좀……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사이에서 혜택을 보는 게 상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고소득층인들한테 좀 더 급여를,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 훨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외려 우리가 처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그 반대의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현황에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참에 연금개혁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련 부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래 세대에게 연금 문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윤 박사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이>



출처: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1월 23일(목) 15:35:29  
[질의] 서명옥 위원(국민의힘) 질의 / 윤석명 명예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답변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menu=30&mc=333&ct1=22&ct2=421&ct3=01&#ch3>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59, 60쪽 (계속)

### 진술인 윤석명

서명옥 위원님. 너무너무 좋으신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부담을 많이 덜겠는데요.

주신 말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먹고살면서도 후세대에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지금도 우리나라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크레딧 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들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빠져 있거나 가입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려지만 **아주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거의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올려 준다 그러면 말은 복지 확대인데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국 먹고살 만한 사람한테 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보다는 거기에 쓸 재원을 다른 취약계층한테……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일은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KTX를 타고 가다가 호남 가는데 전주 갔다가 갑자기 대구, 부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복지정책에서의 경로 의존성입니다.** 패스 디펜던시(path dependency)입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연금 제도가 독일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 진술인 윤석명

그런데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 방향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적 길 따로 갈 수 있다고, 복지 경로를 이탈할 수 있다고.** 탈선하면 대형사고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개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필수적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볼 수 없는 게, 아까 앤드류 라일리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OECD Pensions at a Glance로 국가별 소득대체율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41.5% 소득대체율인데 이것 적다고 50%로 올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퇴직연금 보험료가 8.33%예요.** 그런데 이 가입자가 지금 현재 타깃 파풀레이션 대비 53% 가입하고 있는데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입 대상자가 80%가 안 넘으면 소득대체율의 한 축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53%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이나 현대, LG니 저 같은 직장인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입해 있어요. 이중 혜택을 받는데 그건 다 빠져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 기초연금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한국은 소득대체율도 낮고 복지 지출도 낮은 걸로 나온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59, 60쪽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9월 달에 발표했던 안이 구조개혁이 아니라 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두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자동안정장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퇴직연금의 점진적 강제화를 추진하겠다**하는 거거든요. 점진적 강제화를 해서 퇴직연금 탓기 파플레이션이 80%가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갑툭튀로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최소 15%에서 20% 올라갑니다. 지금 40%로 유지할지라도 OECD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소득대체율은 55%, 60%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69-73쪽 (최보윤 의원 질의)

### 최보윤 위원

저는 윤석명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금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국가에 던지는 질문은 매우 절실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지속 가능합니까?'라고 현 상황에서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연금은 그냥 없애세요'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많은 기성세대도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명 박사님께 세 가지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질의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첫째 질문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와 같은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자동안정장치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안정장치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박사님 자료를 보면 강한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12%에 소득대체율 30%임에도 불구하고 2070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높아지자는 주장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구간에서 어떤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술인 윤석명

최보윤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진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IMF 경제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에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소득대체율 40%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보험료율을 22.8%로 올리지 않으면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고령화하고 연금제도 단 두 가지 요인으로 국가부채가 2070년에 200%로 올라간다. 이게 IMF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공포 마케팅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OECD 보고서를 쓰는 앤드류 라일리가 예를 들면-48쪽에서 써 놨어요-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지라도 13% 이상 훨씬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도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69-73 (최보윤 의원 질의)

여기애 아까 말씀드린 미카 비드룬트, 이즈모 리스쿠도 마찬가지고 일본 공무원은 저한테 아주 제가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일본은 지금 보험료율 18.3% 부담하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이 32% 전후 수준입니다. 일본 공무원이 저한테 한중일 연금 전문가한테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머뭇거리다 물어본 게 이 거예요. '한국은 일본보다 보험료는 절반도 부담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본보다 연금을 더 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우리는 거의 없다. 이건 제 혼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들여다 보면 모든 사람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는데 왜 국내에서만 지속가능하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핀란드식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조개혁을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이게 들어오니까 범위가 너무 넓으니 모수개혁만 하자 그러는데 핀란드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 유지하고 핀란드식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이피션트(life 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해서 보험료 2%p에 상응하는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해도 우리는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오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안정파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핀란드식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연금 받는 게 다 확정된 뒤에 그것도 앞으로 30년 뒤에 첫 번째 받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을, 올해 물가상승률이 2.3%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23만 원인가 되겠지요? 그 액수를 조정을 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년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핀란드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이피션트는 뭐냐면 핀란드가 지금 보험료가 24.4~24.8%이고 정부 택스까지 부담하면 28%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명목적인 소득대체율은 애뉴얼 어크루얼 레이트(annual accrual rate)로 1.5로 소득대체율이 60%인데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이피션트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이 50%고 장기적으로는 44.3%까지 떨어져요, 28% 수준을 부담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얘들은 연금 재정이 제도가 균형에 맞췄다 그러면, 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상했던 기간보다 연금 받은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30년 받으면 10년 더 주니까 재정불안정이 심해질 것 아닐 겁니까? 핀란드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이피션트는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생애 총 3억을 연금 준다 그럴 때는 3억을 다 주는데 10년 더 받으니 매년 그만큼을 차감하는 게 핀란드식의 자동안정장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액이 깎이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핀란드는 안 깎이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평균 수명이 단 1~2년 만에 2~3년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점몇 개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그 쿼터(quota) 만큼 근로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연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69-73 (최보윤 의원 질의)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은 구조개혁이라 그러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복잡하니까 구조개혁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것은 디파인드 베니핏(defined benefit) 보험료를 얼마내든 연금 급여 수준이 확정된 것에다가 기대수명에 따라 급여액의 바뀌지 않습니까? 디파인드 컨트리뷰션(defined contribution) 개념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DB, 하이브리드 디파인드 베니핏이 돼요. 바이 데피니션(by definition) 이건 구조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수개혁만 우리가 논의할 수 없다는 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2쪽에 있는 강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 30%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에서, 지금 41.5니까 11.5%p를 떨어뜨리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9% 인데 12%니까 보험료를 3%p를 올리는 거지요. 그럼 엄청난 재정안정화 방안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추계 자료입니다. 국회특위에 제출된 자료예요. 기금소진 시점은 207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금소진시점 2055년, 2056년인데 불과 엄청나게 소득대체율은 12%까지 떨어뜨리고 보험료율을 3%p를 올려도 **기금소진시점은 불과 14년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부과방식 보험료가 26.7%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9%잖아요. 거의 세 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소득대체율을 10%p를 떨어뜨리고 보험료를 3%p를 더 올려도.

그러니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소득대체율 좀 올리고 보험료를 올리면 기금소진시점이 몇 년 연장되니 그걸 재정안정화 방안이라 그러는데 그건 토텔리(totally) 잘못된 어프로치(approach)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나,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825조라는 막대한 부채가 쌓여 있고 우리가 매년 19.7% 보험료율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9%만 걷으니까 매년 10.7%p를 적게 걷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보험료를 10% 걷어도 기금은 소진되고 그 뒤부터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 아주 굉장히 인터레스팅(interesting)한 겁니다.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지금 전체 연금 받는 급여의 A값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가입자 평균 A밸류(value)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면 A 밸류 없어지니까 중간 이상 소득계층들은 연금액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지요. 거기다가 소득 상한을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같은 한 85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하면 **중간 이상 소득계층들의 연금액은 또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타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중간 이하 소득계층들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고 가입 기간이 짧다 보니 연금액이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소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너는 피와 눈물도 없느냐, 너는 가진 자만 옹호하는 사람이냐 그럴 것 아니겠어요?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69-73 (최보윤 의원 질의)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건데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안이 아니라 우리 연금제도의 모태가 된 비스마르크형 독일 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2004년에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어요. 서스테이너빌리티 팩터(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로 평균 수명 증가, 출생률 하락, 경제성장을 하락하면 자동으로 안정장치를 작동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의 저소득층들은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얘들은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어요.

하나는 리스트 연금이라고 그래서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내에 얘들은 성실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0% 떨어질 것을 45%로 하니 50%로 하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남성 근로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이미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년 성실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40%, 45%, 50% 논쟁을 벌이잖아요.** 얘들은 영어 표현으로 이퀴밸런스 프린서플(equivalence principle)이라고 그래서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이하 소득계층에, 특히 성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논쟁으로 삼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50%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려면 그 돈은 어디에서 올 거냐? 조선일보에 의하면 부부 기준으로 700만 원인가 8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준을 무조건 65세, 70%가 아닌, 우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금 한 228만 원인가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벌써 10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세금을 국민연금 재원이 아니라 여기에다 투입해서 진정 취약계층·저소득층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국민연금을 통한 공적연금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75-77쪽 (한지아 의원 질의)

그래서 이런 진술인 윤석명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건호 박사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자동안정장치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조개혁 얘기 자꾸 하면 기초연금, 퇴직연금들은 복잡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얘기도 안 하고 국민연금 하나 자체로 구조개혁, 모수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오건호 박사님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예를 들면 우리 정도로 40% 소득대체율을 지급하는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18~20%를 걷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적게 걷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제도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시기상조라고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 균형, 2배는 더 부담해야 될 걸 자동안정장치로 다 해결할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강화 방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 놨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40% 소득대체율 적용하는 나라는 보험료를 18~20%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냈던 안은 뭐냐 하면, 이건 재정계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국회 특위에서도 했던 안입니다. 보험료는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15%까지는 올리자, 6%p를 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모수개혁인 거지요. 거기에는 펀란드식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서 보험료 2%p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달성을 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안정장치예요.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76쪽 (한지아 의원 질의)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19.7%, 이미 우리가 쌓여 있는 1825조라는 GDP 대비 82~83%에 해당되는 막대한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9.7%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 15%라고 그러면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면서 어떻게 15% 올리겠다 그러느냐, 당신이 국민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도 소득대체율 35%짜리 재정 안정도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 보험료율 15%로 올리는 건 형식적으로 소득대체율 35%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치고 나머지 5%p 미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p 정도 해당되는 건 핀란드식 자동안정장치를 넣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도 재정 안정이 달성 안 된다는 건 소득대체율 3%p 부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명했느냐 하면 70년 동안 매년 기금운용수익률을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가정한 것보다 1%p 더 올린다는 것을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지아 위원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부도 계시는데, 어떻게 매년 그것도 70년 동안 수익률을 1%p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외환딜러 경험이 있어요, S-OIL에서. 그때 전설적인 외환딜러가 있었어요, 광주은행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한 해 은행 수입의 80%를 벌어들인 양반이 공격적으로 하다가 그걸로 도화선이 돼서 광주은행이 망했습니다. 우리 노후소득을 담보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70년 동안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외환딜러하고 주식 딜링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 경력을 적었더니 경력이 너무 많다고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금 소진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도 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데, 우리가 독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KTX 타고 전주 가서 갑자기 대구로 못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지정책의 패스 디펜더스(path dependence)입니다. 그런데 독일 제도가 일본 거쳐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아Q정전의 아Q처럼.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독일 얘기에서 우리가 뭘 빼놓고 있느냐 하면 독일은 전체 연금 지출액의 30~35%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은 목적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 2개. 여기서는 반드시 미적립 부채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디파인드 베네핏(defined benefit)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안정장치 가자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고치는 한,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스가 연금 출돈이 없고 인류문화유산에 산불이 났는데도 그것을 끌 헬리콥터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위기에서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뜨끔하실 텐데 하루아침에 외부의 칼로 연금의 50%를 날려 버렸어요.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77쪽 (한지아 의원 질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일로 돌아가 보면 독일은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독일 제도를 베껴 왔으니까, 50~60년 동안 우리보다 보험료를 많게는 5배, 6배 더 부담하고 지금도 2배를 더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35% 더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독일은 지금 제도 기준으로 맞춰 놨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예전에, 과거에 진빚을 지금 세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금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이미 디파인드 베네핏(defined benefit) 방식으로 저를 포함해서 국민이, 제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려면 약속한 액수가 3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3위의 연기금 국가 아닙니까. 1200조가 될까 말까 한데 그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1825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를 걷어야 되는데 지금 9% 걷으니까, 거기다가 매년 10.7%p 적게 걷는 만큼 빚이 더 쌓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금을 하나도 안 넣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뭐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연금개혁청년행동에서 무엇보다도 자동안정장치는 반드시 도입하라고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 마치신 거지요?

한지아 위원님, 왜 미안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79-80쪽 (이주영 의원 질의)

### 진술인 윤석명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이주영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아마도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 안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 이주영 위원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KDI 안과 2개를 거의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베이스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차용한 부분은 있는데 둘 중에서 저희는 지속가능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지금 토론회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진술인 윤석명

47쪽의 맨 윗단을 보시면 미카 비드룬트 이 친구가 핀란드 피니시 센터 포 펜션즈(Finnish Centre for Pensions)의 라이에이즌 매니저(Liaison Manager)라고 그래 가지고 EU, 영국의 연금정책에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다가 써 놨어요,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면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 개혁 대안으로 핀란드식 또는 더 급진적인 스웨덴식 개혁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스웨덴식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것은 100% 디파인드 컨트리뷰션(defined contribution)이니까. 그런데 젊은 층들은 그리로 넘어가는 것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자기가 낸 것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2023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포럼의 좌장을 제가 봤었는데 그때 젊은 층들 불만이 이겁니다. 연금 개혁한다는 다양한 안이 나오는데 저 같은 세대 보험료 3%, 9% 내고 지금 180만 원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보험료를 2배 더 내도 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 가지고 지금보장조항 넣자 말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연금, 펜션즈 리폼(pensions reform)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미 기성세대나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세대들은 어떤 고통 분담을 할 거냐 이것 좀 설득력 있게, 소구력 있게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자꾸 자동안정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장 젊은 층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KDI 안처럼 자기가 낸 만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KDI 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같은 국책 연구원이지만 우리가 27년 동안 보험료를 1%p도 못 올렸는데 KDI 안은 보험료를 한순간에 15% 까지 올리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그래서 청년층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충격 차원에서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료 올리는 모두 개혁하고 핀란드식 라이프 익스펙턴시(life expectancy)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준자동안정장치이고 그것을 합하면서 자기 평균수명 늘어나는 만큼 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우리가 노동시장 개혁해서 더 오래 일하게 하면 연금액이 안 줄 어들거든요.

## 제421회 - 보건복지 제1차(2025년 1월 23일) 속기록 79-80쪽 (이주영 의원 질의)

그래서 이런그리고 적당한 시점에서,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이 선호 안 하시겠지만 스웨덴이 이미 1999년도에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낸, 홍길동이 낸 연금은 너한테 간다, 네 계정으로 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왜 나라가 운용하느냐고 그러거든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퇴직연금 보험료 8.33% 걷는데 이게 소득대체율이 10%도 안 나와요. 매년 기금 운용수익률이 2%도 안 나오거든요.

스웨덴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낸 만큼 주면서도 나라가 운용하면서…… 다른 모든 나라가 스웨덴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층들이 제일 좋아할 것은 자기가 낸 만큼 연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장을만큼 이자를 덧붙여 주는 스웨덴식을 제일 좋아할 텐데 경로 의존성 차원에서 한순간에 갈 수가 없으니 저는 그 중간 단계인 핀란드식으로, 젊은 층들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하이브리드 DB 방식으로 가는 게 일단은 젊은 층들한테 소구력 있을 것 같고.

기초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는 부부가 근로소득 합쳐 가지고 칠팔백만 원 되는 분도 받아요. 젊은 층 얼마나 상실감이 많습니까. 보험료 3%, 9% 내고서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까지 받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중복 수급자가 40%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번 OECD 노인빈곤을 최고 높다는 것,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만 얘기하고 이어서 OECD 권고안은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정부도 잘 얘기 안 해요. 국회도 얘기 안 해요. 전문가도 얘기 안 해요. 언론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OECD가 2010년부터 매번 한국 보고서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한국의 기초연금 투입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운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핀란드 예를 들면 핀란드는 1990년대 초에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우리로 치면 기초연금 34만 원 수급자가 93%였어요. 그런데 10년 뒤인 2000년대 초에 그 수급자 비율이 44%로 떨어졌고 지금은 4.8%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2007년에 도입된 65세 이상 노인 70%한테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 세금 걷어서 무조건 기초연금 준다는 이것 폐지하고 노인도, 지금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 얼마나 소득이 많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받는 젊은 층 그런 사람보다 더 부유한 분들,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사람을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70%에 기초연금을 주는 것을 정책 부담이 있더라도 이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과감히 이건 문제가 있다, OECD도 이것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퇴직연금 현황과 쟁점사항

## - 수익률 제고 및 단일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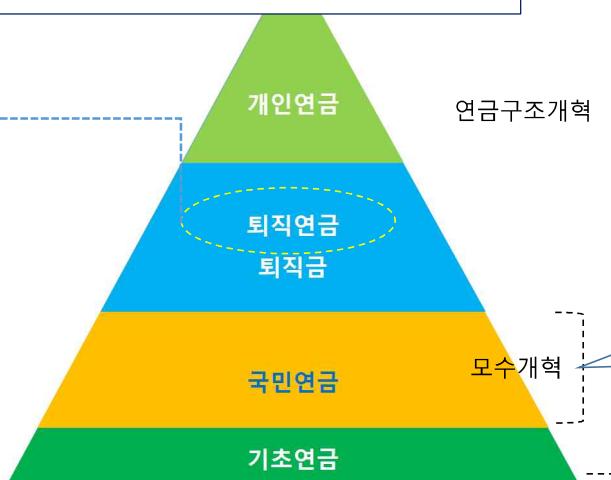
연금연구회 세미나

2025.2.11

상명대학교 김재현

### 1. 퇴직연금의 개혁 필요성

- 적립금 규모 2024년말 430조원 추정
- 2023년말 382.4조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 매년 12% 이상 성장 중(고용노동부)
- 2032년에 1,000조원 달성 예상



- 연금 개혁의 범위나 속도와 별개로 퇴직연금의 개혁이 시급
  - 퇴직연금(DC)의 소득대체율은 13%대로 추정되어 기대에 미달
    - DB 16%, DC 13%(25년 가입, 5년 평균수익률)[자본시장연구원, 2022]
    - 신규 가입자(40년): 13.8%(투자수익률 3%, 25년 가입시 8.3%)[보험연구원, 2022]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 7~8%p 제고 → 20%대로 진입
    - 국제기구 권고 연금소득대체율 60~70% 수준 접근 가능
    - 국민연금 모수개혁 변수, 기초연금과 개인저축을 고려
- 정치권: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 연금연구회: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3% + 퇴직 후 재취업

## 2. 퇴직연금의 현황 및 과제

### (1) 수익률 제고(질적)

<퇴직연금 유형별 수익률(2014~2023)>

구분	DB		DC		개인형IRP		월평균 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월리금 보장형 (94.5%)	실적 배당형 (4.1%)	월리금 보장형 (78.5%)	실적 배당형 (16.8%)	월리금 보장형 (64.9%)	실적 배당형 (27.3)		
2014	3.11	-3.64	2.93	-3.9	2.97	-3.01	3.7	1.3
2015	2.45	1.93	2.22	0.75	2.07	0.46	3.1	0.7
2016	1.96	1.44	1.91	-0.52	1.45	-0.56	3.6	1.0
2017	1.48	5.54	1.64	7.1	1.19	6.64	3.1	1.9
2018	1.54	-0.25	1.72	-5.51	1.28	-5.38	4.3	1.5
2019	1.74	3.88	1.94	7.63	1.52	7.51	4.5	0.4
2020	1.74	4.89	1.69	13.24	1.27	11.95	1.2	0.5
2021	1.45	2.85	1.28	7.34	0.97	7.32	3.9	2.5
2022	1.79	-5.08	1.94	-16.92	1.78	-16.27	3.8	5.1
2023	4.26	9.54	3.87	14.44	3.75	13.93	3.4	3.6
<b>연평균</b>	<b>2.15</b>	<b>2.03</b>	<b>2.11</b>	<b>1.94</b>	<b>2.10</b>	<b>1.88</b>	<b>3.46</b>	<b>1.84</b>

주: 연말 적립금액 기준평균, 2015년 이전은 분기 수익률의 연평균 수익률, (비중)은 2022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KOSIS, e-나라지표

3

❖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첫번째 이유는 지나친 원리금보장형 쓸림(약 89%)에 있음

❖ 구조적으로

- ▶ DB는 운용책임이 사용자에 있고 (퇴직시)평균임금 x 근속연수가 확정이므로 리스크 낮음.
- ▶ DC/IRP는 운용책임이 개인에 있고,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DB(동일 급여)보다 불리

❖ 현실은

- ▶ DC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불리, DC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물가상승률과 거의 차이가 없어 이중으로 불리

❖ 두가지 과제

- ▶ 첫째, 수익률 낮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낮춤
- ▶ 둘째, DC/IRP 실적배당형 수익률을 상당 수준 제고
- ▶ 둘째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첫째를 해결하기 어려움

## 2. 퇴직연금의 현황 및 과제

❖ 어떻게 실적배당형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가? →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

❖ 가장 큰 원인은 계약형 지배구조만 허용되기 때문

계약형에서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사이의 퇴직연금계약을 매개로 퇴직연금제도가 유지됨. 동 계약은 운용관리 계약(기록, 계리 등 사무 / 운용상품 제시 등) 및 자산관리계약(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으로 적립금을 보관/운용/지급)으로 구성

-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계약을 통해 많은 것을 수행하지만(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아래 상품 라인업, 사무처리 등)
- ▶ 가장 중요한 투자 책임은 우리(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있다! → 금융상품의 논리로 접근
- ▶ 결국 DC/IRP 퇴직연금을 예적금이 가능한 변액연금처럼 만들 → 저조한 수익률은 오로지 가입자의 몫  
→ 보수적인 선택(원리금보장형 쓸림)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했으나, Opt-in 기반에 원리금보장형 편입으로 효과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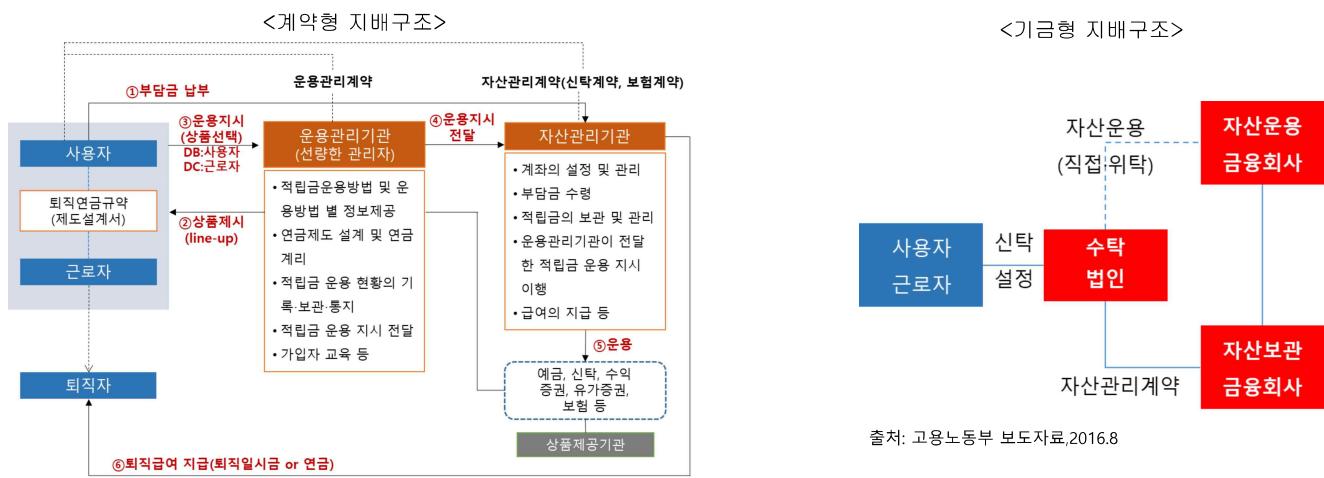
4

## 2. 퇴직연금의 현황 및 과제

❖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립금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전문 운용능력을 갖춘 수탁자 출현이 Key!

❖ 국민연금과 같은 메커니즘을 갖춘 기금형 도입이 시급

- ▶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탁자 책임(신뢰)을 지며, 합리적 투자원칙 아래 기금운용본부(전문성, 비용효율성)에서 운용
- ▶ 기금은 비영리는 물론 영리 수탁법인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경쟁 제고
- ▶ 영국 NEST의 디플트옵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9.9%(2024), 호주는 49개 영리/비영리 슈퍼애뉴에이션 기금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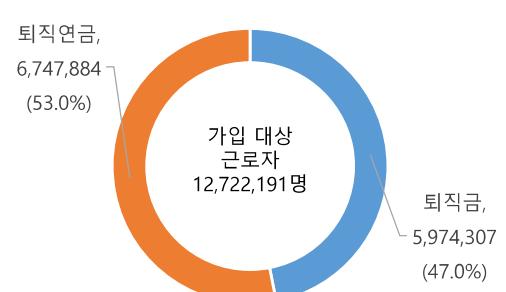


5

## 2. 퇴직연금의 현황 및 과제

### (2) 퇴직연금 단일화(양적 측면)

❖ 이론상 퇴직연금(사외적립)이 퇴직금(장부상 부채 인식) 대비 수급권 측면에서 우월



사업장규모	도입 대상	퇴직금(개소)	퇴직금도입율(%)
5인 미만	899,725	<b>806,183</b>	<b>89.6</b>
5~9인	397,439	<b>268,983</b>	<b>67.7</b>
10~29인	235,829	<b>101,798</b>	<b>43.2</b>
30~49인	41,259	<b>10,918</b>	<b>26.5</b>
50~99인	29,860	<b>5,571</b>	<b>18.7</b>
100~299인	15,361	<b>1,910</b>	<b>12.4</b>
300인 이상	5,710	<b>475</b>	<b>8.3</b>

사업장규모	가입 대상	퇴직금(명)	퇴직금적용율(%)
5인 미만	1,362,293	<b>1,202,004</b>	<b>88.2</b>
5~9인	1,516,840	<b>1,069,163</b>	<b>70.5</b>
10~29인	2,286,307	<b>1,184,283</b>	<b>51.8</b>
30~49인	952,149	<b>416,804</b>	<b>43.8</b>
50~99인	1,199,643	<b>470,309</b>	<b>39.2</b>
100~299인	1,527,291	<b>477,283</b>	<b>31.3</b>
300인 이상	3,877,668	<b>1,154,461</b>	<b>29.8</b>

6

## 2. 퇴직연금의 현황 및 과제

- ❖ 왜 퇴직일시금에 머무르고 있나? → 퇴직연금제도가 매력이 없기 때문 아닌가?
- ❖ 영세사업장에게 가장 큰 허들은 취약한 Cash flow(사외적립 부담), 관리비용 등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기반으로 30인 이하 사업장 도입 촉진 필요
  - ▶ 원래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지원금으로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
  - ▶ 2024년부터 푸른씨앗 가입자도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급여 부담금을 10% 추가 적립하는 효과(고용노동부, 2024)
  - ▶ 가입 지원 및 높은 운용수익률(2023년 6.97%) 실현에도 불구하고 계약형(3조원)에서 푸른씨앗(7천억원) 전환이 더디
- ❖ 최소 수익률 보장과 같은 특단의 조치도 고려할 필요
  - ▶ 계약형 및 푸른씨앗 가입자 중 80.6~90.3%가 최저수익률을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과반이 물가상승률이나 은행 예금금리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힘(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설문조사, 2024)

7

## 2. 퇴직연금의 현황 및 과제

- ❖ 대형사업장에게 가장 큰 허들은 연금지급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임
  - ▶ 퇴직 후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라고 하니 현행 DB는 '사외적립된 퇴직금'에 불과
  - ▶ 적립금이 충분히 크면 연금 수령을 선호하므로 단일 Pot에서 계속 적립금을 담을 수 있게끔 해야 함
  - ▶ 2023년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한 53만 계좌 중 89.6%가 일시금을 선택 10.4%가 연금으로 수령  
→ 평균 퇴직급여액은 일시금의 경우 1.6천만원, 연금수령의 경우 1.4억원(적립금)
- ❖ 누군가 도입~운용~지급 등 전(全) 단계를 책임지고 처리해준다면 굳이 퇴직금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임
  - ▶ 현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입~운용 단계만을 관리해줄 뿐, 지급 단계는 IRP(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으로 해결  
→ 개인에게 투자 책임 → 원리금보장형 쓸림 또는 곧바로 일시금 수령 유혹
- ❖ 따라서 국민연금처럼 연금지급까지 책임지는 기금형 출현이 절실히
  - ▶ 기금형이 도입된다면 노사 협의나 수탁자의 전략에 따라 최소기여율 8.33%+ $\alpha$  기여나 종신연금 지급 등도 가능

8

### 3. 결론

- ❖ 현재 퇴직연금(DC)은 추정 소득대체율이 13%대에 머물러 최소 7~8%p의 역할 제고가 요구됨
- ❖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적(수익률), 양적(도입률) 개혁이 절실히
- ❖ 그동안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투자책임을 사용자나 개별근로자에게 지우면서 연금화도 분리되어 제도이기 보다는 금융 계약처럼 유지되어왔음
- ❖ 연금시대에 걸맞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입구부터 출구(연금지급)까지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자가 필요
- ❖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기금형(수탁법인)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임.

※ 최근 정부 일각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DC/IRP 적립금을 100% 주식 투자 허용 주장 → 문제의 본질에서 비껴 나감

## 그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이유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 □ 들어가며: 풀리지 않는 의문

거대 야당 대표의 2월 말까지 처리 지시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랜 기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며 토론자는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특정 세대와 집단에 한정되며,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텐데, 왜 그렇게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걸까? 도대체 소득대체율 인상을 관철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의 전개 과정을 보면, 먼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문제는 노인빈곤율의 공식 명칭은 ‘노인 소득 빈곤율’이라는 점이다. ‘소득’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일단 넘어가자.

다음 단계에서는 “폐지를 줍는 노인”과 “용돈도 안 되는 연금”이 등장한다.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의 사진이 동원되고, 한 달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연금액이 제시된다. 그러나 왜 연금액이 그렇게 낮은지? 보험료는 얼마를 냈었는지? 가입 기간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라는 거대한 개념이 등장한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포함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따라서 국민연금은 재정보다는 사회적 연대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연금 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재정 문제가 걱정됐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 투자 수익”과 “세금 투입”이 보조 가설의 형태로 등장한다. 또한, 2024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협박성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국

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 □ 주장에 대한 검토

먼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다. 다시 말하지만 '노인 소득 빈곤율'이다. 즉, 소득 측면만을 고려한 수치라는 뜻이다. 하지만 빈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소비,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친다.

또한, 노년기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미성숙(가입 기간 및 노동시장 조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 자녀 교육비 부담
- 주택 구입비 부담

결국, 현재 노년 세대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빈곤의 주요 원인이다. 당신들이 준비를 못했으니 당신들이 책임져라는 말이 아니다. 토론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높다고 주장, 그리고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모두 선후관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수준 낮은 궤변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연대 개념을 살펴보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슬로건만으로는 기성세대 또는 노년세대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사회적 연대 담론을 동원한다. 공적연금 제도의 본질은 세대 간 연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젊은 세대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노후에는 보상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설사 그때 피해를 보더라도, '사회적 연대'라는 거룩한 가치를 위해 어린 당신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젊은 세대가 피해를 강조하며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를 주장하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써우는 효과를 가진다. 심지어 이 과정에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등의 수사가 등장하며, 우리가 이 정도 고생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깟 연금 조금 더 받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한다. 도덕적 우월감을 이용한 압박이다.

이러한 논리 구조에서는 수치와 그래프가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수치와 그래프는 폐지 줍는 노인 사진 한 장과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연금 개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재정 안정론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더 나아가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들을 외면하는 자’, ‘사적 보험을 선호하는 자’, 심지어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자’라는 비난까지 가한다.

#### □ 도대체 왜?: 소득대체율 인상 집착의 이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그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가? 최근에는 42%, 43%, 44%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올리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몇 %의 차이는 사소한 것이라면서도, 그 사소한 것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답은 단순하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과 세대가 있고, 이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온 정치·사회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어느 정당과 궤를 같이 하는지를 보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세대는 조직화되지 않았고, 투표 참여율은 낮으며, 아예 투표권이 없거나, 심지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을 챙길 이유는 없다.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우리는 미적립 부채나 미래 세대의 피해를 강조하며 논리적 접근을 했지만, 애초에 국민연금 개혁이 비당파적 국가 과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재에 국한된 정치적 이슈였다는 사실을 우리만 몰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든다.

#### □ 나가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featuring AI

마지막으로, ChatGPT에 질문을 던졌다. 물론 유료버전이다.

“너는 지금 한국의 20대 청년이야.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에 대해 너의 생각을 말해줄래?”

그 답변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연금 개혁은 하되, 강제성이 적은 방향으로!
- 개인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활성화로 선택권 보장!
-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 필요!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은 반대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이 필요!

현재 젊은 세대에서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도 결국,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에 대한 반발이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참여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튀는 자들만이 이익을 챙기게 되고, 피해를 입은 나머지 세대는 게임 참여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누가 먹고 튀는 세대이며 누가 피해를 보는 세대인지 굳이 특정하지 않겠다. 국가의 책무는 먹고 튀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다.

## <노인빈곤율 때문에 소득대체율 올린다는 거짓말>

김지영(이투데이 인구정책전문기자, 정책학 박사)

###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노인빈곤율 못 낮춘다

#### ○ 빈곤 노인<sup>1)</sup> 중 1인 가구의 49.5%, 2인 가구의 32.2%는 공적연금 미수급

-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도 미수급 가구는 혜택에서 배제
- 30대 국민연금 가입률<sup>2)</sup>은 78.3%이나, 플랫폼 노동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약화, 여성 경력단절 등 고려할 때 현재 가입자의 일부는 가입기간 10년 미달로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현재 30대의 미래 공적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특수직역연금) 수급률은 70% 안팎에 그칠 전망. 현재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 공적연금 수급 빈곤층은 소득대체율 아닌 가입기간 문제로 빈곤

- 공적연금 수급하는 1인 빈곤 가구의 93.6%는 수급액 50만 원 미만. 현재 수급자들은 소득 대체율 45~70% 적용 세대. 적은 연금액은 낮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짧은 가입기간에 기인.

#### ○ 빈곤 노인, 연금만 없는 게 아니다

- 빈곤 노인 중 1인 가구의 45.9%, 2인 가구의 34.8%는 근로·사업·재산소득 부재. 이 중 재산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구성.
- 고령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의 경직성 등이 원인.
-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총소득 중 시장소득 비중 커짐.

#### ○ 소득대체율 4%p 인상의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1~2%p

- 소득대체율 4%p 인상해도 빈곤층의 연금액 증가는 2만~5만 원. 이에 따른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1~2%p이며, 이는 40년간 장기적으로 나타나 향후 10년간은 효과가 없음.
- 소득대체율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현재 대기업·정규직(생산직) 가입자. 소득대체율 인상 후 가입기간 따라 연금액 10만~20만 원 인상.

### □ 노인빈곤율,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 취약계층 가입기간 2년 연장, 소득대체율 4%p 인상 효과보다 커

- 10년 가입자는 가입기간 1년, 20년 가입자는 가입기간 2년 연장 효과로 급여액 10% 증가 효과. 따라서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사업(누루누리) 개편(사업장 단위→가입자 단위),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통해 가입기간을 1~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급여액 인상 효과 커.

#### ○ 노후소득 보장 핵심은 시장소득 복원

1)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을 추산.

2) 9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국민연금공단)을 토대로 계산.

-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 확대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활용한 주택연금,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시장소득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p 이상 인상하는 효과.
- ‘소득인정액인 하위 70%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현재 선정 기준액 수준으로 결정)’로 개편한다는 전제로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급여액을 선별적으로 인상하면 장기적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로 재정 충격을 줄이면서 시장소득 공백도 보완 가능.

#### □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 ○ 소득대체율 인상,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 적립금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급여 지출(소득대체율)과 가입자 수. 현재 보험료율 인상은 적립금 소진 시기를 늦출 뿐, 적립금 소진 후 부과방식 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적립금 소진 후 부과방식 비용률을 높임. 현재 보험료율 인상은 현재 가입자가 ‘조금 더’ 내고, 적립금 소진 시기를 7~8년 늦추는 측면이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아님.
- 소득대체율 인상은 필연적으로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수반. 미래세대 부담 전가 없이 소득 대체율을 44%로 인상하려면 현재 보험료율을 21.7%로 인상해야 함.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은 무의미.

##### ○ 비용은 보험료가 아닌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

- 재정은 보험료와 달리 ‘현재 세대’가 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함. 세대 간 상생 측면에서 현재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비용은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아닌 현재 재정으로 조달해야.
- 단, 무분별한 의무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지원대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필요.

## <‘연금 약탈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사회’로>

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국민연금 구조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

-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소진 예상
-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로 연금 지급 불가능 상황 초래: 현 국민연금 구조는 젊은 세대에게 기약 없는 약속을 강요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하여 연금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약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릴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므로 빈곤층의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국민연금만으로 중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함

### □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필요

- 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1998년, 2007년)은 모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모수 개혁)방식에 집중하였으나 모수 개혁은 정권 변화·경제 상황 악화 시 정치적 논란이 재발하는 문제가 있음: 결과적으로 현재 연금제도는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현재 세대의 연금을 보장하는 약탈적 구조로 변질됨
- 연금 개혁의 핵심은 경제성장률·기대수명·가입자 수 변화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논쟁 없는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일본과 같이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지연, 노동시장 활성화, 중·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 수급액 확대보다는 기초연금 등 보완적 제도 강화 필요
  -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도 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혜택을 받게 되며,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실제 수급액도 충분하지 않음
  - 연금제도가 기존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문제 해결에는 한계: 국민연금 수급액 확대보다는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노후 보장을 우선해야 함
  -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직접 해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필요
  
- 개혁의 시급성: ‘연금 약탈 사회’를 막을 기회
  - 단순한 모수 개혁(보험료 인상, 지급액 조정)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 이러한 구조는 ‘연금 약탈 사회’를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 구조 개혁 지연 시, 청년 세대 부담 증가 및 사회적 갈등 심화를 막을 수 없으며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대 간 공정한 연금 구조 형성 필수
  - 현재 연금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 → 연금제도를 통한 합법적 약탈 방지 필요: 정부와 국회는 연금제도를 통한 미래 세대 약탈 구조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 개혁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 국민연금 개혁이 단순히 현재 세대의 연금 수급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를 통한 합법적 약탈을 막고,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386세대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박동석 (아이뉴스24 사장)

지난 2007년 이후 18년째 연금개혁이 단 한 발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것은 미래문제에 관심 없고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 주축으로 부상한 386세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소위 386세대 정치인들은 젊어서부터 부모세대가 일군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만 했지 기여는 전혀 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뜻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0년간 5만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는 지난 1953년 477억원에서 2023년 2401조 원으로 70년 동안 5만 336배 확대됐다.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7%에 육박했다. 1인당 국민소득(1인당 국민총소득, 미 달러 기준)은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3년 3만 6194달러로 늘면서 540배 확대된 것으로 계산됐다. 연평균 9.4% 증가다.

1960년대 경제개발부터 시작된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은 386세대들의 젊은 시절을 황금기로 만들어줬다. 일자리가 급증하자 대학졸업후 누구나 원하는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다. 대기업들이 대학마다 돌아다니며 신입사원을 구할 정도였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 일들이었다.

386세대 정치인들은 특히 젊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30년이상 권력과 부를 독점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기득권이 된 386는 포스트 386세대에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후배 세대들이 386세대가 구축한 거대한 아성에 좌절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 파렴치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청년세대의 좌절은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2천조 수준으로 역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터기기 일보 직전이다. 기업부채도 2천조 수준으로 가계부채및 기업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를 넘는다.

또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구조적 침체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오던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8%는 잠재성장을 2.0%를 밑도는 전망이다.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미 대통령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여파 등 미래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은 도처에 깔려있다.

연금개혁이 중요한 것은 나라의 곳간, 즉 재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기업

처럼 재정이 부실하면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없다. 세대간 불평등은 나라 전체를 혼돈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일찍 연금을 도입했던 남미국가들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사례가 잘 말해주는 사실들이다.

정치권도 모르지는 않을 터다.

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두렵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진전이 없다.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을 '독이 든 성배'라고도 한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것인가.

지난2007년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지급연령을 순차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다.연금개혁은 이후 18년동안 진척이 없다.

강력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386세대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

"그 때는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호사를 누려야 밥그릇을 놓을 것인가. 386 정치권이 권력과 부에 취해 있는 동안 연금시한폭탄은 터지고 청년들의 미래는 그대로 사라진다.

386세대 정치인들에게 영화 <친구>의 대사를 들려주고 싶다.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386세대 정치인들이 부모세대로 부터 기름지게 받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청년세대들에게 돌려줄 때도 이젠 됐다.

##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납득가능한 개혁>

서동휘(연금연구회 청년회원)

### □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인식과 불신의 원인

#### ○ 예측되는 미래

- 내야할 돈(보험료율)과, 받을 수 있는 돈(소득대체율)이 유지되거나 지금 받는 돈이 더 늘어난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와 경제 저성장 속에서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라는 결론이 예상된다.
-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액수와 연력층은 정해져 있으며, 마지막 세대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이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차라리 지금부터 납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금 납부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 국민연금 개혁, 청년 세대가 원하는 방향

#### ○ 청년이 원하는 연금 개혁의 핵심

- 연금 구조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 제공과 납득 가능한 개혁이 필요하다.
- 특정 세대가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불공정하며, 내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이 제도를 지지하기 어렵다.
- 현재 경제 저성장과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아질 것이다.

#### ○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의 조건

-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세대별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 연금 개혁은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의 최후의 안전망(Safety net)으로서 유지 되려면, 모든 세대가 일정 부분 희생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 ○ 청년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 느끼는 주요 문제점

- 청년들에게 연금 개혁은 당장 눈앞의 생계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와 확보되지 못한 지속가능성으로 인해 연금에 대한 거부감과 무기력이 증가하고 있다.
- 연금 개혁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잘못된 정보를 근거한 개혁안에도 크게 반응

하기 어렵다.

- 특정세대에 유리하게 개편돼도, 그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개혁을 요구할 창구가 없다.
- 결국 부담이 가중되는 순간, 모든 갈등이 폭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할 것이다.

□ 연금 개혁, 정치가 아닌 데이터로 해결해야 한다.

○ 자동조절장치의 필요성과 사람의 한계

- 단기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 개혁이 정치적 문제로만 접근될 경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 각 세대별, 상황별로 원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모두가 지금보다 손해를 감수해야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 많은 청년들은 당장 보험료율을 낮추어 내는 돈이 적어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며,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보지 못했기에, 오지않은 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손익에 집중할 것이다.
-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분들도, 강제적으로 징수될 때 약속받은 금액을 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 청년으로서, 자동조절장치는 납득가능한 대책인가?

- 완벽한 대책은 아니겠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납득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일어난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조절장치는 필요한 개혁안 중 하나이다.

□ 국민연금과 노인빈곤, 왜 분리해서 접근해야하는가?

○ 연금과 세금은 구분되어야 한다.

- 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고 돌려받는 구조이지 자본의 재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다.
- 방목적이 다른 세금과 연금을 혼용하면 제도는 신뢰를 잃을 것이다.
- 경제 저성장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연금의 목적을 흔들어 세대간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인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복지적 정책에도 반대하게될 청년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회안에서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해서 소득이 낮았던 노인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모수개혁을 넘어서: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 상향과 퇴직연금 가입 확대>  
이은아(매일경제 논설위원)

□연금 납입과 수급 시기 불일치 해소 시급

-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
  - 55~64세 고령층이 주된 직장을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
  -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63~65세
  
- 소득 크레바스와 연금재정 불신이 촉발한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증가
  -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2024년 96만1000명에서 올해 107만명으로 증가 (2023~2027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에 발생한 소득공백이 조기수령 주원인
  -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조기수령 부추겨

□연금 의무납부 연령 상향·고용 연장을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

- 모수개혁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론 노인빈곤 해소 어려워
  - 소득대체율이 낮은 근본 원인은 짧은 연금 가입 기간(2022년 기준 연금 수급자의 23.5%가 가입기간 5년)
  - 65세 이상 노인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 아니며, 은퇴가 임박한 잠재적 빈곤 노인 역시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소액 수령자로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현실
  
- 노후소득 보장 효과 큰 의무납입 연령 상향
  - 가입 기간 연장은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방법
  -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 5년 연장시 소득대체율 5%포인트 인상(OECD 권고사항)
  - 급여, 연금수령 총액, 퇴직금(퇴직연금) 증가로 실질적 노후 보장 강화

-건강수명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

○ 의무납입 연장을 위한 고용연장

-고용연장은 의무납입 연장의 전제 조건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층 신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대 갈등과 기업 부담 급증 등 부작용 초래

-획일적 정년연장시 대기업·공공 부문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 집중  
\*정년 65세 연장시 도입 5년차 59만명 추가고용, 연간 30조2000억원 추가 비용 발생(한국경제인협회 분석)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의 고용연장 해법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부터 단계적 정년연장 논의 제안

○ 가입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기금 재정 부담은 여전한 숙제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 연장시 추가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로 인한 정(+)의 효과와 가입 기간 연장에 따른 수령액 증가로 인하 부(-)의 효과 동시 발생

□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대를 통한 노후 자금 확보

○ 노후 연금으로 자리잡지 못한 퇴직연금

-2023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 사업장 기준 26.8%, 근로자 기준 53.2% 불과(300인 이상 91.9%, 30인 이상~299인 78.2%, 30인 미만 23.7%)

-중도인출 인원 年 6만4000명, 금액 1조7000억원

-연금 수령비율 10.4%

○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편 시급

-퇴직연금 가입 확대 또는 중도인출 기준 강화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커지고 임금체불 예방 효과도 기대

- 고용부, 퇴직연금 가입 단계적 의무화 방안 2025 업무계획에 반영
-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회사에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는 부담

- 노동개혁과 보조 맞춰야 진정한 연금개혁 가능
  -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연금개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연장, 퇴직연금 개편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 머리 맞대야
  - 부담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포퓰리즘 경계
- 재정추계로 드러난 명확한 숫자를 무시하고 눈앞의 표심만을 쫓는 근시안적 개혁 경계해야

# 정치권아 부끄럽다! 허접한 연금개혁 시도!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국회연금특위 가버넌스 이해 당자자 참여

기초연금 100% 지급, 하위 20% 집중 지원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재직근로자 계속고용, 은퇴자 배별사로 다세대가 일하는 장수경제

본 토론문은 정치권에 보내는 NGO대한은퇴자협회(KARP,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NGO)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에대한 노년단체연대회의의 최소 청구서입니다.

우리 자식 세대 청년들은 외칩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해로운 것은 바로 우리 미래세대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우리 미래에 잔뜩 고통을 줘어주는 이 허접한 연금개혁 시도, 2025년 국민연금개혁을 해냈다는 정치권의 또 다른 표플리즘으로 우리를 우롱하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절규 합니다”.

부모세대, 인생 선배세대로 작금의 허접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시도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최소한 이것만은 해놓고 가자는 대안제시입니다.

연금개혁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권 누구도 만지기 싫은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이 변죽만 올리다 사선다식 제안으로 국회서 멈췄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대 목표중 하나인 국민연금개혁이 국회 다수당이 시한부 통과를 내걸고 개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NGO대한은퇴자협회는 모처럼 열을 받고 굴러가는 연금개혁이 이번 기회에 꼭 이뤄줘야 한다는 열망 속에 최대가 아니라도 국민연금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한계치의 연금개혁은 이뤄져야 현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세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라고 제언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졸속으로 짬짜미해 또 다른 2~30년을 흘려 보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하루 885억원씩 쌓여가는 연금부채는 미래 세대의 빚입니다. 싸가지 없는 정치권이지만 보험료 인상이라도 하고 가자는 여야합의를 고마워 해야 하는 구차한 처지지만 이것만은 손보고 가야 한다는 최소한의 청구서 임을 정치권에 거듭 밝히며 이를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 내 상임위 설치 구조 문제입니다.

2025 임시변통(?) 연금개혁이후 다룰 국회 내 기구입니다. 여야의 주장을 떠나 연금개혁 특위는 동수의 의원에 노사 및 관련 NGO가 참여하는 가버넌스 구조로는 공정한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 할 수 없습니다.

둘째, 13% 보험료 인상, 40% 소득대체율, 자동안정장치도입 이 세 가지는 걸고 가야 합니다.

-13% 보험료 조정,  
짬짜미든 뭐든 의회가 합의하니 하루 885억씩 늘어나는 빚 좀 주리려면 몇 년 연명 늘리는 13% 수액이라도 맞겠습니다.

-소득대체율 40%,

18년전 참여정부 시절 선배의원들이 “땅땅땅” 만든 연금개혁 스케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다시피 만들어낸 소득대체율 스케줄입니다. 깨부술 수 없습니다.

당시 노무현 개혁안에서 기초노령연금 8만원선은 소득대체율 5%에 달하는 액수로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아지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이 또 다른 공적연금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현재의 기초 연금 소득대체율은 15%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 41.5% plus 15%는 56.5%에 달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수령액에 따라 다르지만)

2028년부터 소득대체율 40%선을 유지한다고 볼 때 50%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수치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100% 조세 부담입니다.

현재 추세로 65세 이상 70% 기초연금을 유지해 간다면 2070년대 초 160조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엄청난 기초연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해 보험료 내는 연금가입자는 급격히 줄고, 베이비부머의 급증으로 연금수급자는 급증합니다.

전부 훗 세대 부담입니다.

여기에서 대한은퇴자협회 주장은 기초연금을 말 그대로 국민연금 밑의 basic pension으로 깔며,

#1 박근혜 대선공약대로 100%기초연금 지급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65세이상 70% 소득인정액을 맞추려고 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228만원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 점진적 70세 연령상향으로 100% 지급해 가자입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26조 2000억원입니다,

2070년 초 기초연금 소요액 160억원의 1/3 정도를 미래 최대 한계예산 (50억 원?) 마지노선으로 잡고,

(65세이상 100% 연금 지급 소득대체율)

정보, 계산능력에서는 토론자보다 IQ가 훨씬 높은 충직한 AI 비서와 상의한 결과,

-기초연금 65세 이상 10만원과 15만원 지급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226만원)

10만원 지급 = 4.4% 소득대체율

15만원 지급 = 6.6%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인상입니다.

#4 연간 소요재원은,

65세이상 80% 월 10만원 지급, 20% 월 70만원 지원 시,  
약 25조 800억 소요

65세 이상 80% 월 15만원 지급, 20%에게 70만원 지원 시,  
약 29조 6400억원 소요

#5 70세로 상향시,  
80% 월 10만원 지급, 20%에게 70만원 지급 시,  
약 13조 2000억원  
80% 월 15만원 지급, 20% 70만원 지급 시,  
약 9조 6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전 노년층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며 한정된 재원을 유용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과제입니다.

#### 셋째,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심화되는 인구의 노령화로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대비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즉,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해 보험료율, 수급자 연령, 급여액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연금제도가 일찍 발달된 선진사회 국가들은 이미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대양을 날고 있는 747에 자동운항장치를 없애자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재직근로자 계속고용과 은퇴자 배별사로 다세대가 일하는 일터  
계속고용과 배별사는 극심한 노령사회의 Workforce 감소 대책입니다.  
계속고용은 정년이나 미래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현직에 있는 세대의 고용의 유연성을 통한 근무제도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첨예한 대립은 서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도(KARP은퇴협:정년 전 임금삭감제라고 혹평함)가 굳어진 우리사회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른 고용연장은 우리사회에서 이미 실시되고 전 직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벌사(Learning and Earning Longer)는 은퇴자들을 위한 “배우며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를 말합니다.

장수시대의 장수경제(longevity economy)로 퇴직해 나오는 은퇴세대 인력 활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시간당 100명 이상의 부모들이 자의반 타의반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를 보듬할 제도는 가르쳐 배우게 해 다세대가 일하는 현장에서 멘토 멘티로 갖춰온 경험 경력을 쓸아내는 것입니다.

연령포용 다세대 일터는 Senior Workforce 활용으로 노령사회를 헤쳐갈 새로운 대안입니다.

이들 일터를 통한 고용연장으로 연금 납입기간을 늘려 간다면 소득대체율 상승, 조세 증가, 소비증가 등 6070+의 경제적 수명연장으로 복지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자체 할수록 후세대 부담이 늘어납니다.

연금의 100년 대계를 위한 계획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습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락을 위한 기싸움에 민생은 맴들어 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심이 50점이라도 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촉구합니다.

2025 2. 10

NGO KARP대한은퇴자협회

## <방황하는 연금개혁…세대 간 형평성인가, 착취인가>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

- 길 잃은 연금개혁, 초심으로 돌아가야
  - 누구나 연금개혁을 말하지만, 무엇을 위한 연금개혁인지는 동상이몽
  - 연금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지속 가능성’
    - 지속 불가능한 제도는 당장은 좋아보여도, 결국 막대한 부작용을 남기고 실패할 운명
  
- 과거 2차례 연금개혁은 모두 ‘더 내기 or 덜 받기’ 개혁이었음
  - 1998년 김대중 정부의 1차 연금개혁(실질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때 추진)
    - 소득대체율 70%→60%로 인하(정부 원안은 55%)
    - 노령연금 수급연령 60세→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의무화
      - \* 여야 합의로 통과(1998년 12월 17일)
  - 2007년 노무현 정부의 2차 연금개혁
    - 보험료율 동결, 소득대체율 60%→단계적으로 40%로 인하
      - \* 당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원안은 보험료율 12.9%로 인상이었음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도입
        - \* 여야 합의로 통과(2007년 7월 3일)
    - 2025년 3차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기’는 실현 가능한가?
      - 소득대체율 인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
      -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필수, 반드시 관철해야 할 목표

- 연금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대 간 형평성’
  - 소득대체율 인상은 ‘세대 간 불균형(착취)’ 심화
    - 기성 세대=이익,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손해
  - 연금연구회 긴급 기자회견(2025년 2월 4일)
    - “우리 손자, 손녀 세대는 피멍이, 아니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윤석명)
    -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대놓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김신영)
  - 소득대체율 인상의 부당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이해와 동참이 절실함
  
-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아이러니
  - 통상적으로 보수 정당은 노인 세대, 진보 정당은 청년 세대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 노무현 정부의 2차 연금개혁은 이런 해석이 가능
    - 진보 정당은 연금개혁으로 청년 세대 부담 축소, 보수 정당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노인 세대 지원 확대
  - 현재 정치권은 정반대 모습
    -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론(복지 확대), 국민의힘은 눈치 보기(?)
  
- 노인복지 위해 국민연금을 희생하는 게 정당한가?
  - 노인복지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국민연금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음
  - 국민연금 수급액 늘려도, 빈곤층(국민연금 미가입자)은 소외되는 역설 발생
  - 기초연금 재조정(소득별 차등 지급), 일본식 정년 후 재고용 등 논의 필요